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조치법 국회 제출

### 민주, 긴급 의원총회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

### 여기구 의원 “업계 피해 보상·정부 역할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양 방류됨에 따른 입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여기구 의원과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선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텐데, 현재 우리 정부는 계속해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풀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절대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수산물을 드시게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된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그 수산물도 국민들이 드시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률안에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오늘 정말 방류되면 수산업계에 피해가 올 텐데, 직·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자세히 규명해달라. 국제 공조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안에 다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항후 상황에 따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검출되거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

발견되는 지역이 분명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 법률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기초가 달라진 것인지 묻자 “국제법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위해선 WTO의 SPS 협정에 따라 위해성이나 우려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제조건”이라며 “우리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할 때도 우리가 소명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입금지 수산물을 후쿠시마 산에서 보다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어떤 검출이 높은 수치로 되거나, 검출된 수산물이 잡히거나 잡혔던 연안의 경우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국회 본회의서 피켓 부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 “정부·여당이 나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말하라”

### 진보당 강성희 의원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이에 대해 “오만한 발상”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사다 총리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고,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이미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박을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이며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이라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나서 해양투기 반대를 말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버려진 원전 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축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고 있지만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산업단지에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촌 산업폐기물 유입의 주원인이 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부지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농가의 어려움, 농촌의 산업폐기물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음·고창)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축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봉산업법’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 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

## 민주 도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 “尹정권, 국제사회 비난을 자국 합리화만 고집하는 日행태에 편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와 이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를 자국의 합리화만 고집하며 정당화 하는 일본의 행태에 윤석열정권은 이에 편승하며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자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부 여당에는 공명볼에 불과하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선동과 가짜 뉴스를 생성하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 세계 여러나라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와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또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당시 정권에 책임을 물겠다는 자들이 이제는 원전 오염수가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는다는 이중적 행태를 늘어놓고 있다”며 “그때는 위협했고 지금은 위협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 중 철저한 감시, 정확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은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밝힌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자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 부안, 매력에 배바지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상사화 전경